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 KERI Manifesto Evaluation —

이태규, 황인학, 조경엽, 이병기, 김현종, 변양규, 유진성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1판1쇄 인쇄 / 2012년 3월 29일

1판1쇄 발행 / 2012년 4월 2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3771-0057

ISBN 978-89-8031-627-4

값 10,000원

제 1 장 논의의 배경 · 5

제 2 장 평가기준의 설정 · 7

제 3 장 주요 선거공약 · 10

제 4 장 평가 · 12

제 5 장 요약과 시사점 · 17

<참고 1> 정책별 세부 평가내용 · 19

<참고 2> 평가결과표 · 54

<참고 3> 공약평가단 · 55

<참고 4>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주요 선거공약 분류·비교 · 56

표
목
차

- <표 1> 각종 Manifesto 지표 · 8
- <표 2> 진품약속 시리즈 · 10
- <표 3> 유쾌한 정책반란 · 11

제 1 장

논의의 배경

- 4월 총선을 겨냥하여 각 당은 앞 다투어 선거공약 성격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이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Manifesto 운동 차원에서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서 선거공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에서의 선거공약 평가는 거의 없는 상황
- 특히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경제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연구소 차원에서 선거공약 평가는 시의성이 높은 과제
 - 경제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통한 선거공약의 질(quality)을 측정
- 연말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약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연기기관 차원의 공약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총선공약 평가의 경우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대선의 경우 전체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
 - 이번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대선 공약평가에서는 새로운 지표 및 방법론을 도입할 예정
- 이번 평가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 당의 선거공약만을 평가대상으로 삼

으며 연구원 내외 총 28인의 평가인단이 전문분야별로 양 당의 공약을 평가함.

- 평가 대상이 되는 공약은 경제와 관련된 분야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재정·복지, 노동,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의 7개 부문
 - 각 당의 경제 관련 공약 중 이 7개 부문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발표되지 않은 공약도 있으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하여 관련 부문으로 분류

- 공약의 평가는 각 지표에 대한 점수로 나타내며 부문별 평가인단의 점수를 평균하여 각 지표에 대한 평가치를 산출
 - 점수분포의 이해를 위해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도 부록으로 수록

제 2 장

평가기준의 설정

□ 기존 Manifesto 지표와 KERI 지표

- 대표적인 선거공약 평가(manifesto) 지표
 - SMART 지표(영국)
 - SELF 지표(한국지방자치학회)
 - FINE 지표(한국의회발전연구회, 동아일보)

- 선거공약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있어 일반화된 원리, 또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선거의 성격과 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평가 지표를 설정

-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경우 지역공약도 제시되나 본 평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을 평가대상으로 삼음.
 - 따라서 지역민의 입장, 또는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평가는 배제

<표 1> 각종 Manifesto 지표

평가지표	평가기준	특징
SMART 지표	구체성(Specif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계획(Timed)	공약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 평가에 중점
SELF 지표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 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후속조치(Follow up)	지방자치 측면의 공약평가에 적합
FINE 지표	실현가능성(Feasibility) 반응성(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지역민의 반응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의 가치적 측면의 평가 가능

- KERI 지표의 경우 경제부문(그리고 경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문)의 공약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구성
 - o 경제원리(시장경제 원리) 측면의 평가지표(시장친화성과 효율성 등)를 포함

□ KERI 지표의 평가기준

- 구체성(Specificity)
 - o 정책 목표, 추진 방법, 소요 자원, 자원 조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실현가능성(Feasibility)
 - o 자원 조달이 가능한가?
 - o 공약의 목표가 과도한 정치적·사회적 갈등 없이 달성될 수 있는가?
 - o 공약의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편이 필요한지, 그리고 개편과정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는가?

- 합리성(Ration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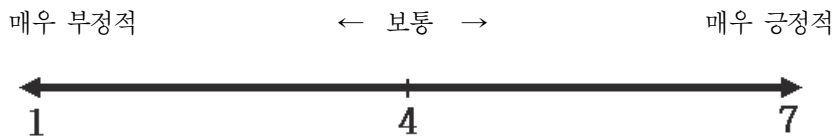
- 공약의 목표 및 추진방법이 합리적인가? (시장친화적이며 경제논리에 부합하는지,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정책인지 등)

- 효율성(Efficiency)

- 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가?
- 공약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저비용의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가?

□ 평가의 척도

- 평가는 7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4점이 보통(또는 중립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평가기준에 대해 긍정적 평가임.



제 3 장

주요 선거공약¹⁾

□ 새누리당

-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책공약을 제시

<표 2> 진품약속 시리즈

제목	주요 내용
여성전문금융법 개정	• 영세 중소기업가맹점에 대해 의무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비정규직 근절	•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대기업 정책방향	•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보호
골목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연대보증 개선	• 은행권 및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제도 개혁
청년일자리	• 공공부문에서 청년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창업 활성화 추진
워킹맘 지원	• 2013년부터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하고 맞춤형(나이에 맞는 세심한)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청년중장년어르신	• 청년: 대학 등록금 인하, 사병월급 15년까지 2배 인상, 복무기간 중 학점 취득 이수 및 자격 취득 여건 확대 • 장년층·어르신: 정년 60세 의무화 추진, 임금피크제 활성화,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장기요양보험 확대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 등
재원 확보	공약을 위한 재원조달은 국제기구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 : 세입 확대=6:4’에 맞춰 마련

1) 자세한 선거공약은 첨부 참고자료 참고

□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의 경우 「유쾌한 정책반란」이라는 시리즈의 정책공약을 발표

<표 3> 유쾌한 정책반란 시리즈

제목	내용
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해소	• 3대 핵심과제: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1% 슈퍼부자증세
일자리 해결	• 고용률을 63.8%에서 '17년까지 70%로 제고하고 비정규직비율은 25~30%로 축소
창조형 복지국가	•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 등 '보편적 복지3+3' 정책 추진
장애인 복지	•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연금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현 월 15만 4천 원 → '17년까지 39만 8천 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살리기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세금 바로 세우기	• 1% 부자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 재원확보 •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
대북정책	•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 남북주도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
검찰개혁	•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여성정책	•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고용률 현재 53%에서 65%로 제고 • 30여만 명의 가사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조건 개선 • 영유아 등의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
미디어 공약	•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	•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 강화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확대
어르신 복지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 • 정년을 60세로 연장,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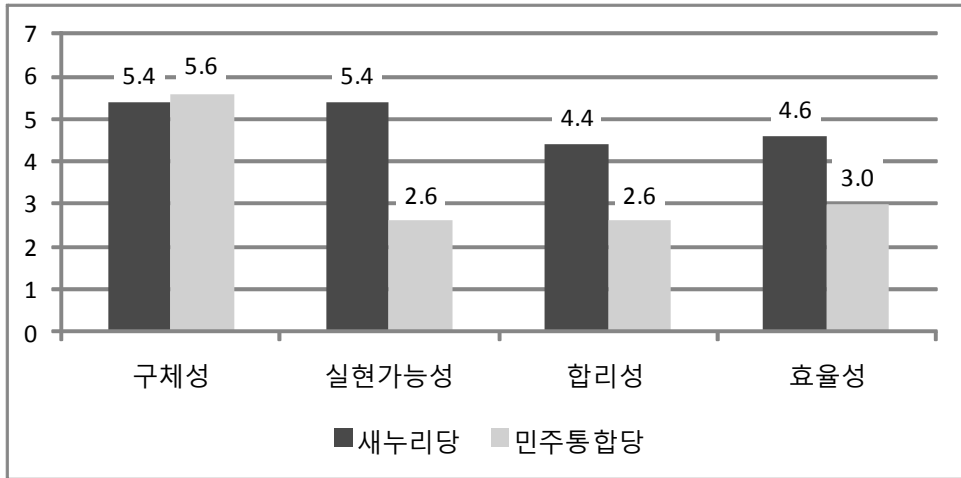
평 가

□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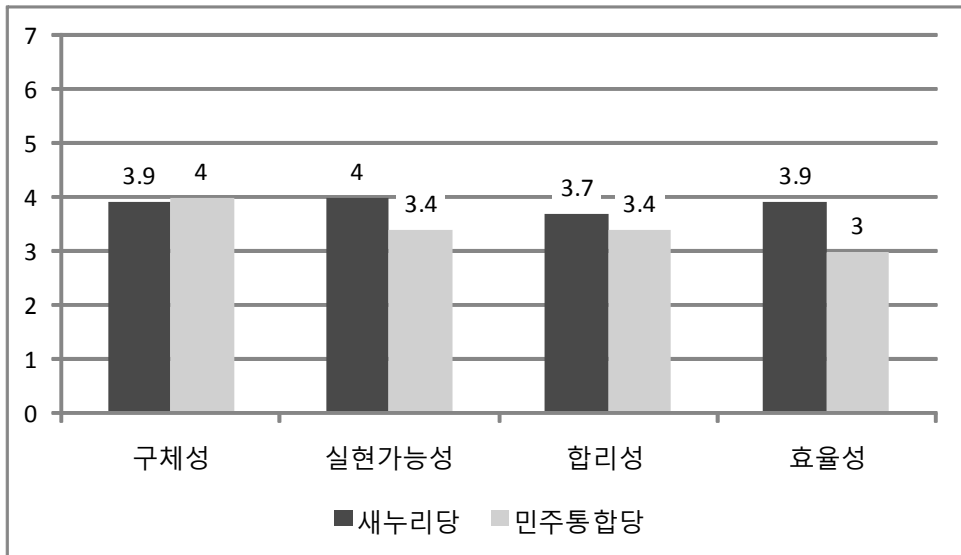
- KERI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를 1~7점 척도로 평가
- 공약평가단 : 원내외 각 분야의 전문가 28인(첨부 자료 참고)으로 구성
- 양 당의 선거공약을 내용에 따라 7개 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재정·복지, 노동,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에 대해 평가
- 양 당의 각 부문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한 값으로 부문별 선거 공약 평가
 - 평가위원의 수가 매우 적은 과학기술 부문(평가위원 2명)의 경우는 평균 값보다는 개별 평가점수를 참고할 필요(각 부문별 개별 평가점수는 참고 자료에 수록)

□ 부문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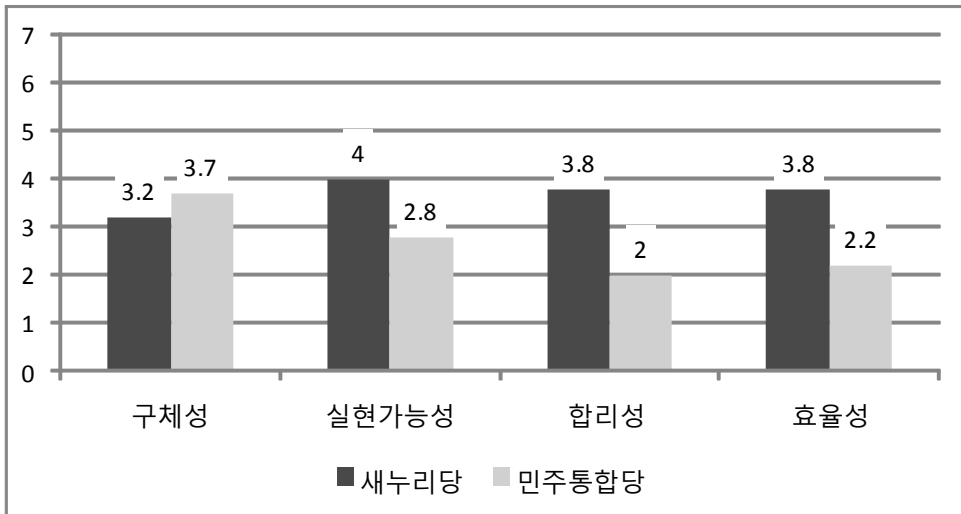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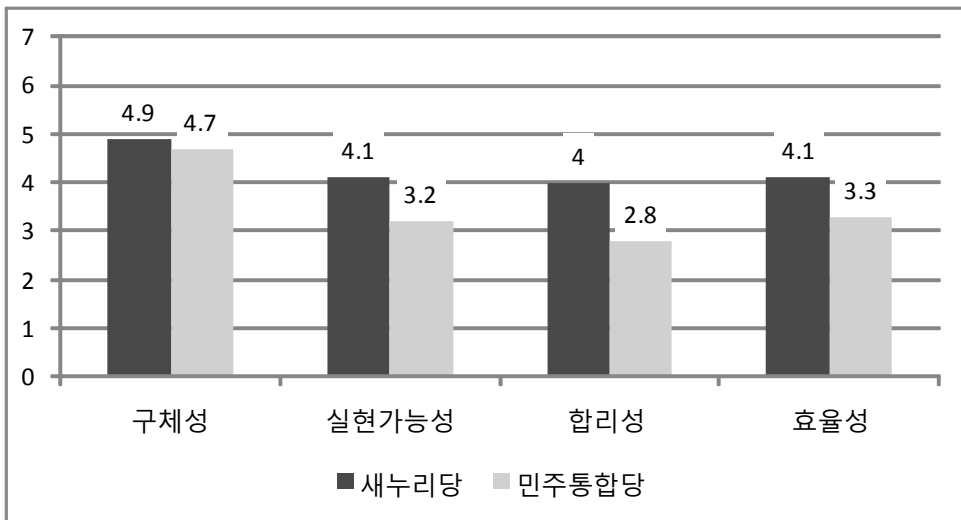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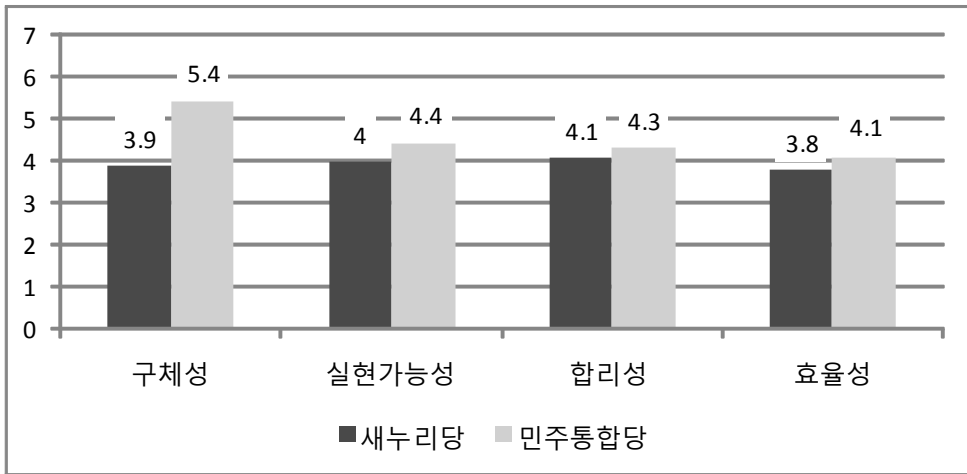
<재정·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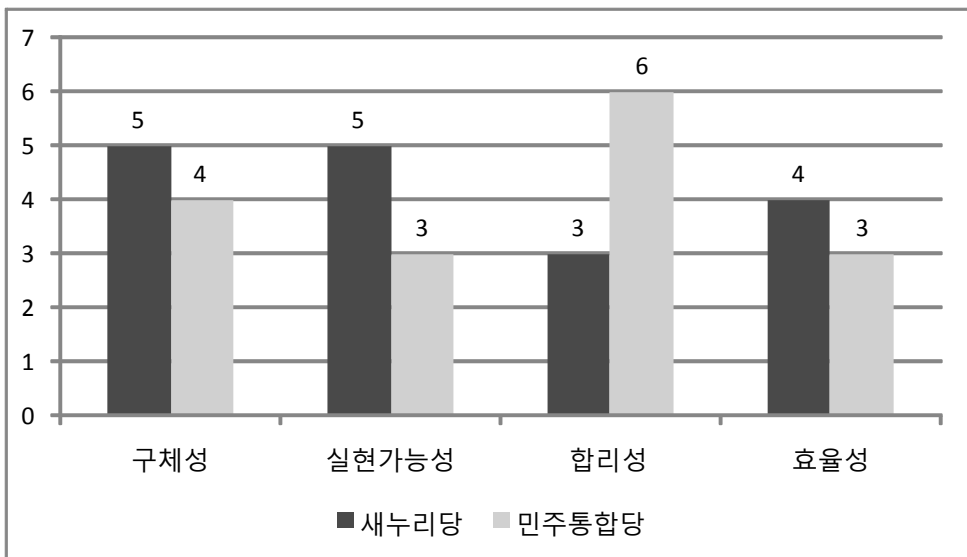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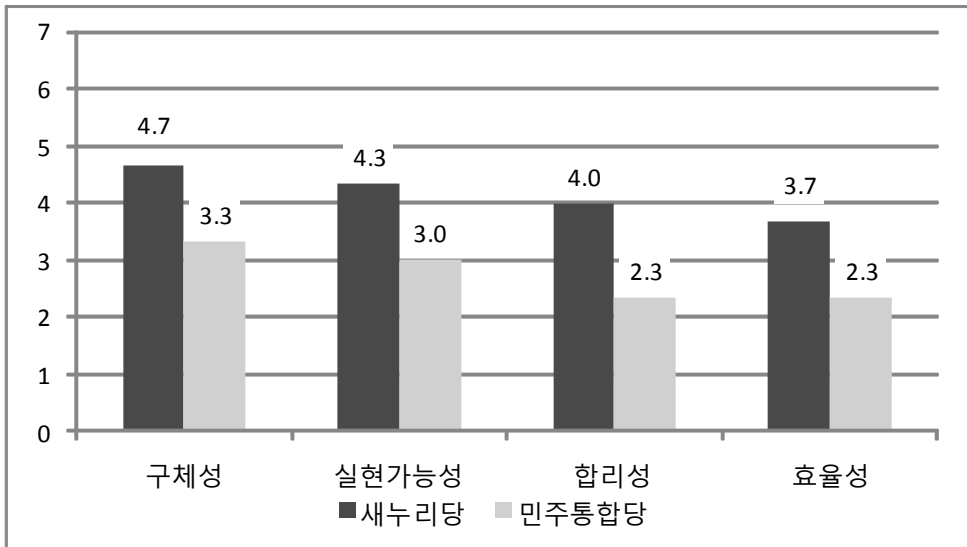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



제 5 장

요약과 시사점

- 구체성에 있어서는 민주통합당이 우위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위
 - 양 당의 주요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구체성에 있어서는 민주통합당이 나은 평가를, 그 외 기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나은 평가를 받음.
 - 평가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의 추진체계(구체성)는 잘 갖추었으나 공약의 내용면(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서는 새누리당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것임.
 - 특히 대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의 평가에 대한 양 당 간 격차(새누리당의 우위)가 큰 편임.
 - 유일하게 여성·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네 기준 모두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음.

-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양 당의 공약 모두 보통 이하의 낮은 평가
 - 양 당 모두 네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보통수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여서 공약의 질(quality)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
 - 특히 중소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네 기준 모두에 대해 양 당의 공약이 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음.

- 양 당 모두 선거의 아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공약도 분배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강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
 - 결론적으로는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양 당의 공약 모두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

-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선거공약을 그대로 정책화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경제주체들 간의 활발한 토론 및 소통이 필요

<참고 1> 정책별 세부 평가내용²⁾

1. 대기업 정책

■ 새누리당

(1) 구체성

-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어떤 기업이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으며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추진방법 및 추진수단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편임.
 - 부당내부거래의 실효적인 법 집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하겠다, 부당 단가인하 및 담합행위 등에 징벌 손해배상(3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임.

-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선언적 의지의 표명에 불과하거나, 구체적 추진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시: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독립중소기업에 사업기회 참여확대 방안 추진: 공시대상 확대와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는 구체적 대상이나 판단기준이 없음.
 -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의사만을 제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수준,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공약평가위원들의 정책별 평가 중 중요내용을 간추린 것임.

(2) 실현가능성

- 공약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나 민주통합당의 공약에 비하면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 강화 등 기존의 제도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은 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

- 다만 강제성을 요구하는 몇몇 규제는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발견됨.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은 전체적인 사법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3) 합리성

- 대기업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기업(재벌)·시장·정부 등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합리적인 측면과 동시에 자율과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은 시장경제적 방식을 활용하는 긍정적 요소를 내포함.

- 그러나 일부 정책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이 나타났고, 위반자에 따라 처벌 적용을 분리하는 차별적 요소가 남아있음.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단계에서도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강함.
 - 불법 및 탈법행위에 대한 형법 및 특정경제법의 엄격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장 핵심방안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

-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수의계약 비중을 감시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한다는 것은 사적거래의 방식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것임.

(4) 효율성

- 대기업 정책은 시장경제에 대한 시각과 규제철학의 문제이므로 저비용의 대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개입과 규제 확대로 대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 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기적인 직권조사나 공시요구, 규제와 형사고발 등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옥죄고 주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의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음.
 - 손해배상제도 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추진 등은 사적 해결방안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히 추진하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기존 공적규제와의 균형이나 거래비용의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소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민주통합당

(1) 구체성

- 대기업집단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구체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음.
 - 3대 전략에 대해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도 형식적 측면에서 구체성을 갖춘 안이라고 보임.
- 그러나 일부 충돌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새로 제시된 것들 중에는

구체성이 미흡한 공약들도 다수 있음.

- 담합으로 이득을 취한 후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이중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음.
-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규정 명문화나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영업기술이나 사업모델 등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증권관련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및 의결권 대리 행사권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마찬가지임.

(2) 실현가능성

-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빚고 그 결과로 폐지되거나 도입되지 않았던 많은 정책들을 그대로 다시 들고나옴으로써 불필요한 논란만을 재연시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큼.
 - 이미 폐지된 바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히려 더 강화된 형태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의 연속성 문제와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현실화되기 어려움.
 - 기존 순환출자를 3년간 유예를 통해 해소한다는 것은 삼성이나 현대차 등 규제 대상이 될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어 경제에 큰 타격을 무릅쓰지 않는 이상 쉽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정책임.
 -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한도를 4%로 다시 낮추는 것은 2009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계열사 분리청구제도 역시 과거 도입이 검토되었다가 국부유출,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폐기된 바 있어 단순히 재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님.

(3) 합리성

- 대기업집단이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목표에 대한 추진방법이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장친화적 해결 방법이 아님.

- 또한 기본방향에서는 재벌 해체가 아닌 상생이 목적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음.
 - 모든 내용이 재벌의 활동을 규제하고, 사업 확장을 막으며, 나아가 강제적 계열사 분리까지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일변도이며 재벌 스스로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생산적 사업확장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행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배려 등은 찾아볼 수 없음.

(4) 효율성

- 고비용을 수반하는 규제정책으로서 다양한 문제를 노정할 수 있어 경제성장의 둔화 등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야 할 정책, 또한 재벌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정책의 추진에 있어 주로 징벌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대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함.
 - 공약이 실현될 경우 영향력이 큰 것들도 상당수 있으나(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많은 갈등과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큼.

-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의 남발을 막는 취지는 좋으나 법정최저형량을 지나치게 높이는 방식보다는 양형기준의 정비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노동·일자리

■ 새누리당

(1) 구체성

- 정책목표와 추진방법은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가 많으나, 정책 수행에 따른 소요 재원이 대부분 추정되어 있지 않고 채용조달 방법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엔젤 네트워크’ 형성 지원,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 등은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이며 또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의 청년 채용규모 확대 정책은 당위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모든 정책에 소용되는 재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기부금으로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한다는 정책도 채용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함.
- ‘창업활성화’ 정책이나 ‘스펙초월, 내속의 열정과 잠재력으로 취업하기’ 정책은 정책목표와 채용조달방법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공공부문 청년채용 규모 확대’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와 추진방법은 명확하나 정원 확대 등과 관련된 소요 재원 추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2) 실현가능성

- 소요 재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채용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해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고,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실현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물’을 동일하게 지급되도

록 하겠다는 정책은 사업주의 반대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유발할 가능성이 큼.

- 사내하도급 교체 시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토록하는 정책 역시 노사 간 갈등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업체 간의 갈등도 유발하는 정책임.

□ 정책 자체의 실현가능성은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법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아지는 정책들도 다수 있음.

-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사회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이며 또한 대부분 법, 제도의 개편 없이도 실천 가능한 정책임. 단,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결여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3) 합리성

□ 개별 정책은 합리성을 갖추었으나 정책목표들끼리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들이 다수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들은 시장 친화적이지도 못하며 또한 법률적 수단을 통한 규제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합리성이 떨어짐.

- 가령 ‘공공부문 청년채용 규모 확대’와 ‘스펙초월, 내숙의 열정과 잠재력으로 취업하기’ 정책은 상호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공부문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 청년채용 규모확대는 후자의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력한 노조가 있는 일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등 대

중요법(對症療法)적 접근만 시행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위축·고용불안과 같은 부작용만 낳을 것임.

- 또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도 기존 정규직과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내 하도급의 근로여건 개선만 강제할 경우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 업무의 특성과 생산성의 차이 등을 무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한 임금지급’은 기본적인 경제논리에 어긋남.
 -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정책의 경우 경영성과에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제약을 줌으로써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효율성

-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책들도 존재하나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어 효율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고 재정투입의 비용대비 효과성 분석이나 정책시행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음.
 -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이나 선택적 재취업 프로그램 등은 효율성이 높은 정책일 수 있으나, 대부분 소요재원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어 효율성을 높게 보기 어려움.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은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 전체로 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위축, 실업자의 고용기회 축소 등이 예상되어 효율성이 부족함.

- 또한 상황에 따라 소요재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선순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소요비용 및 재원도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민주통합당

(1) 구체성

- 정책목표와 추진방법은 자세하고 구체적인 편이나 소요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가령, 고용률 70% 달성,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 이하 달성, 비정규직 비율 25% 이하로 축소 등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소요재원 파악, 재원조달 방법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없음.

(2) 실현가능성

- 정책 소요 비용 측면이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이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정된 정책들의 비용에 대한 고려를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이들 정책은 상당한 사회적 동의가 없는 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달성하기 어렵고 계층 간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큼.
 -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정책들도 많아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정책들도 다수 있음.

-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와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사용주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계층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집단정리해고 방지 등도 법 개정 또는 재해석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고 갈등유발 가능성이 큼.

(3) 합리성

- 자발적인 유인을 키우는 형태의 정책보다는 단순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많아 합리성이 높지 못하며 대부분의 정책이 시장원리를 반영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님.
- 또한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법률적 수단을 통한 규제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으며 이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없고, 상당한 부작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됨.
 - 실근로시간을 강제적으로 낮출 경우 중소기업의 구인난 가중, 대기업의 자동화 및 해외이전 가속 등으로 국내 고용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또한 비정규직의 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정책 역시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만 위축시켜 국내 고용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고용위축의 부작용을 수반할 것임.
 -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는 업무의 특성과 생산성의 차이 등을 무시하여 설계될 경우 생산성에 따른 임금지급이라는 기본적인 경제논리에 어긋나게 운영될 수 있음.

(4) 효율성

- 정책시행으로 인해 국가나 기업이 부담할 비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정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음.

- 일자리 창출의 기본적인 걸림돌인 고용경직성 완화를 추진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일자리를 나누거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은 부작용만 수반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은 모든 노인에게 확대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시행이 바람직함: 일률적인 확대보다는 재정투입 대비 빈곤감소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
 - ‘정년연장 의무화’는 청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연장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내용(임금조정이 수반된 재취업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

3. 재정·복지

■ 새누리당

(1) 구체성

-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견지에서 세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에 대한 부분적인 증세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

- 전반적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청사진은 많이 개발했지만, 구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천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

립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을 모방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향후 5년간 복지재원 89조 원을 조달하려면, 매년 세출절감 10.7조 원, 세입증대 7.1조 원을 조달해야 하나 세출절감과 세입증대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음.

(2) 실현가능성

- 복지재원 89조 원을 세수증가로 26.5조 원, 건강보험 증대로 13.7조 원, 세출절감으로 48.8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하였는데 3가지 재원 모두 실현 가능성이 약함.
 - 매년 약 9.8[48.8/5]조 원의 세출 절감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해 보면 불가능함.
 - 건강보험의 수가인상과 세출절감 부분은 정치적 논란의 심화는 물론, 국민적 합의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 실현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평가됨.

(3) 합리성

- 새누리당의 경우 근본적으로 복지욕구를 주도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조세차원에서 담당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주주 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 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등의 과제는 자본소득 전반을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증세에 치우침으로써 세제 전반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부채를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유지에 대한 책임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만함.
 - 다만 아쉬운 점은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넘어서 현재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관

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임.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전재정으로의 조속한 복귀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이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따라서 재원조달의 문제는 현존하는 재정 적자의 관리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라 평가됨.

(4) 효율성

□ 전반적으로 복지재원 조달 방향이나 원칙 등은 경제적 효율성에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실천계획이 미흡하므로 실제로 정책들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임.

□ 국민들의 자조(自助) 자립(自立)의 정신이 훼손되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이며 금융 및 자본에 대한 지나친 증세가 세제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서 온갖 비과세감면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효율성 측면의 정합성이 부족함.

-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최저한세 1%p 인상안 제외), 금융 및 자본에 대한 과세를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 새누리당은 결국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금융 및 자본에 대한 과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셈.
- 하지만 소득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데 일정 부분 동의 한다면,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예를 들어, 비과세 감면 정비)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함.
- 개방화 시대에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자본이나 고급인력에 대한 중과세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둔화시키는 비효율성 야기

■ 민주당 통합당

(1) 구체성

- 새누리당의 안에 비해 영역별·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화하여 구체성을 높이려 노력하였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에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차별을 보임.
 - 비과세감면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새누리당과 대동소이하나 제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 안은 없다는 것은 잠재적인 유권자 계층 및 집단을 지금은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보임.

- 복지정책의 경우도 내용의 구체성은 인정되나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됨.
 -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필요재원을 조달한다고는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은 높다고 할 수 없음.
 - 실제로 세계경제 통합화의 가속에 따라 향후에는 외국발 경제위기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경제에 대한 낙관적 예상을 토대로 한 재원조달 방안은 다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2) 실현가능성

- 단순한 재원배분을 넘어서, 제도를 왜곡시켜, 자원배분이 심각하게 왜곡 될 수밖에 없는 정책안들이 주 내용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음.
 - 공약의 목표나 구체적 내용이 지나치게 親복지, 反부자, 反기업, 증세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 편가르기식 이분적인 정책공약이어서 소득재분배를 개선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음.

- 세제개편의 세수증가 효과가 목표금액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출항목은 구조적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항목들인 반면, 세입부문 정책은 구조적으로 세입이 증가하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7대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연평균 32조 원은 2012년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타 예산이 5%만 증가하더라도 매년 예산 증가율이 15%에 달하는데 경상성장률 7%(실질 성장률 4% + 물가상승률 3%)의 두 배에 달해 엄청난 재정적자의 발생이 불가피함.
 - 법인세율 인하효과에 대한 논쟁은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세 구간 수의 국제적 추이로 보아 사회적으로 제도적 개편 과정이 무리 없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조세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국세감면율 2000년 12.5% → 2011년 13.7%)되어 왔으며, 2010년 지방세 조세지출 보고서(지방세감면율 2005년 12.8% → 2010년 22.3%)를 보더라도, 조세지출의 규모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움.

(3) 합리성

- 국민소득 2만 달러인 현 상황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거나 적어도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분배 복지에 치우친 정책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복지를 더 어렵게 할 것임.
 - 보편적 복지,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과 양극화 해소 등은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평가됨.
- ‘부자감세 철회’, ‘1% 부자 증세’,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요약되는 ‘세금 바로 세우기’는 매우 잘못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
 - 부자감세 철회로 부자가 득을 보거나, 1% 부자증세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세의 강화로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며, 영세사업자는 현재 세

금을 내지 않거나 이미 세 부담이 낮으므로 세 부담 경감이라는 말 자체가 비합리적임.

- 소득세 기능정상화는 '1% 슈퍼부자 증세'나 최고 세율 인상이 아니라 각종 공제의 축소나 중산층의 세 부담 증대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

□ 복지재원 조달 방법도 경제논리에 어긋나고 반시장적인 이념에 기초하고 있어 합리성이 상당히 낮은 정책임.

- 법인세 인상은 최종재화의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인상은 특히 비탄력적인 재화(음식료품)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더욱이 증세에 따른 성장 둔화를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의 실업은 증가하고 복지에 의존하려는 서민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반시장적인 제도로 평가됨.

(4) 효율성

□ 민주당의 조세정책을 요약하면 '형평'과 '증세'라 할 수 있으며 형평성과 효율성은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격이라 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동시에 제고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형평성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효율성의 억제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제안된 조세정책은 대체로 조세체계의 효율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의 효과는 낮은 반면 비용은 많이 소요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구조라 인식됨.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제외, 법인세 상위 세율 인하 폐지 등은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제안된 것이지만, 세율인상 등을 통해 조

세의 초과부담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 할 것임.

- 재정적자의 축소 및 건전재정으로의 복귀 등을 생각하면 조세부담율의 증가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효율성을 억제하여 자칫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됨.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가는 정치적 명분은 있을지 모르나, 세수증가 효과나 형평성 제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며 자칫 투자위축 등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 할 것임.
- 특히 국제적으로도 법인세 부분은 완화기조가 뚜렷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높이겠다는 법인세 개편안은 우리세제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우리세제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4. 중소기업

■ 새누리당

(1) 구체성

- 연대보증 개선 공약의 경우 정책의 구체성은 있어 보이나 적용기준이나 절차 준수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연대보증 개선 공약의 경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에게 고질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배경과 주요 개선과제가 명확함.
- 정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나 대출 기관의 대출 자금 회수 방법,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실 자금의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연대보증 제도 개선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리고 신보·기보 등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용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성

이 없음.

(2) 실현가능성

- 골목상권 보호 공약의 경우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지방 소비자를 포함한 소비자들의 피해, WTO 규약과의 충돌 등을 감안했을 때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일부 이익집단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최근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공약을 지지하는 정책 변화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대형마트 등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영업시간제한 등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

- 연대보증 개선의 경우 인적 보증을 대신할 방법들이 비교적 많다는 점과, 크지 않은 인적, 물적 자원 투하로 대출 기관의 구상권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이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합리성

- 약자일 수 있는 중소도매업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는 점이 공약의 타당성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으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약점이 뚜렷함.
- 물론 골목상권을 보호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면,

대형유통업의 중소도시 진입규제가 성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무엇보다 골목상권에 둘러싸인 지역의 주민은 왜 대형유통업체가 줄 수 있는 청결함, 신선함, 낮은 가격 등의 이점을 누리면 안 되는가, 즉 그 지역주민의 소비자 권리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박탈되어도 되는가에 대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함.

(4) 효율성

- 골목상권 보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골목상권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지역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며, 골목상권 보호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움.
 -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직접적 참여보다는 소비자의 판단에 의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단순한 진입규제 조치에 의해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시적 조치기간 내에 해당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마케팅 노하우나 판매기법, 상품경쟁력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 민주통합당

(1) 구체성

- 정책과제들이 모두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크게 보호와 육성 측면으로 나누어 볼 경우, 보호 정책은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육성 측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중소기업 육성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기존의 정책

들을 확대·심화하는 경향이 보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의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즉, 정책 목표는 매우 명료하나 대부분 정책들이 추진 방법, 소요 재원 추정,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님.

□ 중소기업부 신설의 경우 그 장점만 기술했을 뿐, 신설에 따른 조직 편제, 운용, 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 혹은 분석이 없음.

□ 납품 단가 부담 인하(감액)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부담 인하(감액)’의 판단 기준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대기업의 사업 이양 강제 등에 대해서는 강제 방법과 근거에 대한 기술이 없음.

□ 중소기업 공공 구매 이행력 강화 정책에서는 2017년까지 80%까지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주된 개선 분야, 효과 및 국민의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분석이 없음.
-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IT·SW 생태계 구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등도 추진 방법, 소요 재원 추정, 재원조달 방법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짐.

(2) 실현가능성

□ 중소기업 보호목적의 정책은 강제적인 시장구조 조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며, 육성정책의 경우는 R&D 투자 확대와 같이 일부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주로 재정적 지원의 확대로 구성되어 있어 재원조달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큼.

-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헌법이 정한 각종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국민의 후생을 줄이며, WTO 등의 국제법 혹은 규약을 위반하는 사항

이 많아 국내외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과도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영역이나 영업시간의 강제적 제한 등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음.

□ 또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의 경우, 근본원인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음을 감안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 더불어 벤처·창업의 경우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SW R&D 투자 확대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투자를 가능케 해 줄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적합업종 법제화(위반 시 징역형, 벌금형, 사업 강제 이양)는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우리나라 기업을 역차별할 가능성이 있으며, WTO협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합리성

□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들은 방법론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은 시장원칙에 위배되며,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용에 있어서 강제적 처벌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보상제도 등은 경제적 논리에 반하는 조치임.

- 특히 적합업종제도가 강제성을 띠게 될 경우 과거에 실패한 고유업종제도와 차별성이 없어지며, 그로 인해 생겼던 부작용들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것임.

(4) 효율성

- 지나친 보호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은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얻기 어려우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를 통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임.
 - 진입제한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보호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납품단가 현실화라든가 기술탈취의 경우 기존의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관련부문의 규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정책적 효과가 떨어지게 할 수 있음.
 - 또한 창업지원이나 IT투자 등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는 해당 수혜기업의 성과평가가 반드시 병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5. 여성·장애인

■ 새누리당

(1) 구체성

- 정책목표나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세부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정도 되는지가 불명확하며, 세부공약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미흡한 면이 있음.

- 장애인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학급 증설 및 교원 7,000명 양성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이 없음.
-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의 경우 기존 사업과 큰 차별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음.
- 장애인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나 이 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 역할 등에 있어 강화된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및 장애인 교통수단 확충방안,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 방안도 구체성이 떨어짐.

(2) 실현가능성

- 장애인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재원조달만 가능하다면 사회·정치적 갈등 없이 실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조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
 - 장애인 연금 확대에 대하여는 재원조달방법이 필요하며, 장애인 훈련이나 고용을 위하여 특수한 시설지원이 선행되어야 현실 가능하므로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무조건적 쿼터배정은 비현실적임.
 -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증설 방안은 재원조달에 의문이 가며, 대학 평가시 장애인 취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장애인 취업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식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특히 의무고용) 또한 기업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의문임.
- 보육수당 지급이나 시설비 지원 등은 과거부터 논의되어 실행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여성 정책의 경우 철저한 준비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비취질 수 있어 사회적·정치적 갈등으로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워킹맘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못하는 여성들과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3) 합리성

- 정책목표는 잘 설정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추진방법에 있어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교통수단 확충 등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일 수 있지만,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콜택시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
 - 현재 장애인 법적 고용율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기 보다는 경증장애인이라도 고용하도록 독려하고 세제혜택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남성과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정책이 세분화되어 이루어져야 함.

- 무상보육의 경우 모든 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저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저소득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보육시설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임신부의 병원비 지원도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

- 여성정책의 경우 보육비·양육비 지원에 방점을 두고 워킹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유인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노동시장문화’ 개선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여성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또는 기업 문화 개선에 대한 방안은 미흡함.

(4) 효율성

-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성과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정책보다는 선거를 위해 단기간에 고안한 정책들이 많은 만큼 전반적으로 비용대비 원래 목적달성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무상보육의 경우 5세 먼저 시작하고 보육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후 추가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추후 정책을 도입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제시하여 보육 시설의 대기자 명단만 늘리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정책의 효율성은 낮아질 것으로 평가됨.
 - 여성정책에서도 근시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여성고용 친화적인 사회·기업 문화 확산 등 제도적·사회적 기반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정책의 경우 장애인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나 의무조항 등 강제성 공약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큼.
 - 장애의 유형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반적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시설이 특화된 기관을 보다 육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학습권 보장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설정되었으나 일자리 확대 정책은 공급 쪽 보다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을 강구해야 함.

□ 민주통합당

(1) 구체성

-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소요 재원에 대한 추정이 불충분
 - 전체적으로 공약의 내용과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세부내용 중에는 기존 정책수준과 유사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나 소요재원에 대한 근거는 부족함.

(2) 실현가능성

- 추진하려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문화적인 기반위에서 실행 가능한 것인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법과 제도의 개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킴.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도 민간보육시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 복지, 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고는 하지만 개혁이 쉽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됨.
 - 추가적으로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시킨다는 공약도 법적인 개편작업이 사회적 동의를 기본으로 무리없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여성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한다는 목표는 과거 추세(10년간 경황을 정체를 고려할 때 현재 제안하고 있는 추진방법으로는 실현가능하지 않음.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 없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재원조달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위원회 이전,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강화, 여성·소수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등의 공약들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됨.
- 다만, 예산이 소용되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 중심으로 패러다임전환 공약이나 장애인 소득 보장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합리성

- 전반적인 복지공약이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돕기보다는 분배 중심의 생활지원 형태로 마련되어 있어 합리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복지제도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장애인 공약들이 대부분 시혜적인 지원에 치우친 반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은 미흡
- 여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기업에 여성근로자를 강제로 할당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며 연간 근로시간 감축, 여성 비정규직 등은 강제적 조치로 평가됨.
 - 정부주도의 강제시행보다는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여성의 시장진입을 돕는 제도정비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또한 여성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나 시장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53%인 여성고용률을 65%로 높이겠다는 공약은 의지는 좋

으나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한 합리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4) 효율성

- 전반적으로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거 및 의료서비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착되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어렵게 하며 이보다는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시장에서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비용은 줄이면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보다는 지원 위주의 선심성 정책이 많아 비용 대비 효율성은 평균 이하일 것으로 평가됨.
 - 여성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는 저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낮아 효율성이 낮음.

6. 교육

□ 새누리당

(1) 구체성

- 전반적으로 시행방향이나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세부 공약별로 필요한 재원은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 실현가능성

- 특별히 새로운 공약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재정리한 측면이 많아 실행의 어려움은 크지 않으나 재정상황과 연계한 공약의 경우 재정상황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 현재 정부가 교육에 대해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약의 대부분은 행정적,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임. 그러나 재원조달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또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임.

(3) 합리성

- 정부가 개입하여 교육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합리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부분의 공약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반시장적인 것이 많음.
- 교육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지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더 잘 아는 부분이며 정부가 각종 공약을 통해 교육부문을 통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교육의 생성을 방해하는 것임.
-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립을 공약하는 정책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
- 제도권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내실화를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의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4) 효율성

-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약으로 새로운 재원대비 큰 효과를 가져올 지는 의문시되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결

과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 여건의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큼.

- 체험활동 강화,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일문화학교 지원, 산림교육을 통한 정서 함양 등은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자율성이 적어 그 효과가 적을 것임.
- EBS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교육부담 완화는 투입 비용에 비하면 그 효과가 작을 것이고, 공식 학교교육을 강화한다면서 EBS와 같은 비공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상호 모순적임.

□ 민주통합당

(1) 구체성

- 공약의 내용과 추진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각 공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추계라든가 어느 부문에서의 재원조달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언급이 없음

(2) 실현가능성

-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으며 소요재원에 대한 추계도 없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여 실현가능성은 평균이하로 평가할 수 있음.
-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재원조달 계획은 3+1정책과 일자리 및 주거복지, 취약계층지원 등을 중심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어느 부문에서 교육공약과 관련한 재원을 사용하게 될지 재원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 폐지, 고교 정상화 등의 공약은 단기적으로 실현이 쉽지 않고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이며 국가 개입은 오히려 교육이 정치적으로

되고, 일관성과 지속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3) 합리성

□ 공약이 정부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정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다양성과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공약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반시장적인 것이 많음.

-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은 사적 투자 성격이 강한 대학교육에 있어서 과잉교육과 부실교육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며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50%로 증가시킨다는 것도 큰 재원이 소요될 정책임.

(4) 효율성

□ 현재의 경제사회변화를 고려해볼 때 정부중심의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결과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 여건의 악화로 나타날 것임.

- 글로벌화, 지식경제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국공립대학 비중을 50%까지 확대 등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한 정부중심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부정적임.

- 이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학생 및 학부모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교육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

7. 과학기술

□ 새누리당

(1) 구체성

- 대부분의 정책이 현재 이미 실행중인 정책의 확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성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R&BD사업, NDMS, 이공계 출신자의 공무원 특채, 그리고 엔젤투자 및 벤처 M&A거래소 등 제시된 거의 모든 사업은 현재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구체성이 높음.
- 과학기술은 위상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구체성은 다소 부족함.
- 이공계 출신 공직진출 문호 확대정책의 경우 이미 실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출연(연)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음.

(2) 실현가능성

- 현재 실행중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현재 이들 가운데 일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은 부족함.
-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문호 확대는 계속 이야기되고 있으나, 고시출신의 주요직군 독점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실천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출연(연)의 임금상승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인 바 이의 조달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합리성

- 제시된 정책 가운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단지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도 있으며 합리적 해결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정책들이 적지 않음.
 -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사업지원 등을 들고 있으나, 정부구매 정도를 가지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정상적인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 볼 수 없음.
 - 과학기술인의 위상강화 관련 공약의 경우, 현재 제시된 수십 명 수준의 공무원 채용, 출연(연)연구원의 임금상승 정도로는 현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돌릴 수 없으며, 의약학 계열의 인력양성 체계 변화, 벤처창업 정책의 강화 등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장기간 필요함.

(4) 효율성

- 제안된 정책의 대부분은 현재 실행중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검토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R&BD센터, R&BD 펀드는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 국내 기술 이전의 규모로 볼 때 그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큼.
 - 오히려 현재 모든 대학과 연구소에 위치한 TLO의 통합·기능강화가 보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특허관리 역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역관계를 생각할 때 효율성이 의심되는 방안으로서 오히려 특허법원의 심판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 민주통합당

(1) 구체성

- 공약의 구체성이 개별 공약 사안마다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어, 일부는 매우 구체적이거나 일부는 개념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예컨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감축해나갈 것인지는 비교적 소상히 제시하고 있으나, 이공계 출신자의 처우개선은 ‘장학금 지원 확대’라는 식으로 일반론을 서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공약간 편차가 심함.

(2) 실현가능성

- 제시된 과학기술관련 공약은 대부분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전관련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현재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R&D예산 배분을 중소기업·지방에게도 늘려나가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예산의 추가라기보다는 예산배분의 조정에 해당되며, 정책의지에 따라 실현가능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전력사용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탈핵정책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추세로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이 다소 의심스러움.
 - 추가 원전 건설의 유보는 실현가능할 것이나 수명연장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즉각 사용 중단할 경우 기저전력의 부족위험이 우려됨.

(3) 합리성

- 제시된 공약은 출연(연),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의 R&D의 현재 문제점들을 비교적 잘 이해한 기반위에 입안된 것이나 세부 내용 중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다수 있으며 기초연구의 비중확대, 이공계 처우개선 등은 현 정부

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임.

- 원전 관련 정책의 재검토의 문제는 한국적 상황에서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박사급 인력의 일자리 확충도 시장에 맡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증대와 산업의 수요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4) 효율성

□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부의 부활, 출연(연)의 독립성 유지 등은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 투자의 확대는 효율성이 부족할 것이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를 촉진시켜야 할 것임.
- 지역혁신센터(RDA)의 설립은 현재 존재하는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지역 중기청(및 관련기관), 특구청 등의 기관과 필연적으로 상호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정책임.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20%까지 상승시키고자 하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규모(또는 기업·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되어 비용 대비 효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2> 평가결과표

분류	정책부문	평가자	새누리당				정책부문	민주통합당			
			구체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대기업	대기업 정책	A	6	6	5	5	대기업 정책	6	2	2	2
		B	6	6	4	5		6	4	3	5
		C	4	3	3	4		5	2	4	4
		D	6	6	5	4		6	2	2	2
		E	5	6	5	5		5	3	2	2
		평균	5.4	5.4	4.4	4.6		5.6	2.6	2.6	3.0
제정· 복지	조세, 재정, 복지	A	4	3	3	3	조세 복지	4	2	2	2
		B	3	3	4	4		4	3	2	3
		C	5	4	5	4		3	2	2	2
		D	3	5	6	6		6	3	2	2
		E	2	6	2	3		2	5	2	2
		F	2	3	3	3		3	2	2	2
		평균	3.2	4.0	3.8	3.8		3.7	2.8	2.0	2.2
중소 기업	골목상권 보호	A	3	4	4	4	중소기업 살리기	6	4	4	3
		B	4	3	1	3		2	3	4	3
		C	4	3	3	3		4	2	2	2
		D	4	5	5	4		6	5	5	5
		E	4	3	2	2		2	3	2	2
		평균	3.8	3.6	3	3.2		4	3.4	3.4	3
	연대보증	A	4	4	4	4					
		B	5	4	3	4					
		C	3	5	4	5					
		D	4	5	6	5					
		E	4	4	5	5					
평균	4	4.4	4.4	4.6							
노동	비정규직 근절	A	5	3	4	6					
		B	5	4	4	3					
		C	4	3	2	3					
		평균	4.7	3.3	3.3	4.0					
	청년 일자리	A	5	4	4	5	일자리 해결	3	3	3	3
		B	6	6	6	5		4	3	3	4
		C	5	5	4	5		4	3	2	2
		평균	5.3	5.0	4.7	5.0		3.7	3.0	2.7	3.0
	청년 중장년 어르신	A	5	4	4	4	어르신 복지	6	3	3	4
		B	4	4	4	3		5	4	4	3
		C	5	4	4	3		6	3	2	4
		평균	4.7	4.0	4.0	3.3		5.7	3.3	3.0	3.7
	장애인 ·여성	장애인 지원	A	3	4	4	4	장애인 지원	6	6	5
B			2	2	4	3	4		3	4	3
C			5	5	5	5	6		5	5	5
D			5	4	4	4	6		5	3	3
평균			3.8	3.8	4.3	4.0	5.5		4.8	4.3	4.0
여성복지		A	4	5	5	4	여성복지	6	5	5	5
		B	3	3	3	3		3	3	3	3
		C	4	5	5	4		6	5	6	6
		D	5	4	3	3		6	3	3	3
		평균	4.0	4.3	4.0	3.5		5.3	4.0	4.3	4.3
과학 기술	과학과 문화산업 투자	A	5	5	3	4	과학기술	4	3	6	3
		B	5	6	5	5		5	4	3	4
		평균	5.0	5.5	4.0	4.5		4.5	3.5	4.5	3.5
교육	교육	A	5	4	4	4	교육	4	3	2	2
		B	4	4	5	4		3	3	3	3
		C	5	5	3	3		3	3	2	2
		평균	4.7	4.3	4.0	3.7		3.3	3.0	2.3	2.3

<참고 3> 공약평가단

권남훈 교수(전국대)	신현한 교수(연세대)	정선양 교수(전국대)
김경목 교수(덕성여대)	안재욱 교수(경희대)	조경엽 박사(한국경제연구원)
김도현 교수(국민대)	유진성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최광 교수(외대)
김상겸 교수(단국대)	이동규 고문(김앤장법률사무소)	현진권 교수(아주대)
김지연 박사(IBK경제연구소)	이병기 박사(한국경제연구원)	홍인기 교수(대구대)
김필현 박사(지방세연구원)	이영 교수(한양대)	황인학 박사(한국경제연구원)
김현중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이영환 교수(계명대)	최형재 교수(고려대학교)
남재량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교수(인천대)	유진아 박사(보험연구원)
민무숙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종욱 교수(서울여대)	
변양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참고 4>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주요 선거공약 분류·비교

분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노동	<p>비정규직 근절</p> <p>*3대 기본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패러다임 대전환 : 공정임금/고용 불안 요인 보상 -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 -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법적조치 강화 - 규정 신설로 정규직과 차별없는 근로여건을 만들어 가급적 사내하도급 증가를 줄여 나감 -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 사내하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 보장 • 비정규직 감축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기업 자율적 유도 -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부터 시행 	<p>일자리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을 63.8%에서 '17년까지 70%로 제고 - 실근로시간 단축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 연계 운용 • 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시정을 통해 고용의 질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도입,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사내 하도급 등 간접고용 사각지대 줄이기
	<p>청년 일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청년채용확대 추진 - 공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리되 청년채용 비중을 늘려가야 함 •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정보네트워크 '엔젤네트워크'형성 지원,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으로 투자활성화 촉진) -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자금회수 체계 형성 지원, 대기업 엔젤투자 장려 등으로 시장자율의 엔젤투자활성화 적극 유도 - 공공부문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여 엔젤투자 매칭 펀드 방식으로 엔젤투자자금 5,000억 원 조성 -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스펙초월, 이력서 내지 않는 청년취업시스템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 대상자 선발, 각 분야 전문가 멘토를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청년인재은행 설립 -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일자리 정보망의 연계 확대) 		
청년 · 중장년 ·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청년창업활성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록금 인하, 사병월금 15년까지 2배 인상, 복무기간 중 학점 취득 이수 및 자격 취득 여건 확대 • 장년층/ 어르신: 정년 60세 의무화 추진,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선택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어르신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A값의 5%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17년 10% 달성 -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70%에서 '14년 80%, '17년 90% 확대 • 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고령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의 전담인력 확보 •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틀니 50%지원 대상자 및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세 이상 → 전부틀니, 부분틀니까지 지원 : 65~74세 → 급여대상과 부분틀니까지 점진적 확대 • 건강 100세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간호사 4배 확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체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 : 농어촌의 경우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 지정, 건강교실, 건강 상담전화 개설/운영 • '정신건강 지킴이' 체제를 갖추어 노인자살을 줄이고 노인 정신질환 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정신보건센터' 인력과 기능 확충, 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센터 요원은 개별 사례에 맞는 서비스 연계 • 낙상 등 사고요인을 제거하여 노인 안전사고 획기적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안전사고 위험 요인 제거하는 환경 개선 사업 시행 - 노인 안전생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중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유통업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5년간) 금지 	중소 기업 살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틀 마련,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연대보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민전체 의사를 반영한 진입허용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처벌규정 보완,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 • 불공정 하도급거래(납품단가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3배) 도입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 위탁기업(대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을 위무화 •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17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이행력 강화 - 민간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중소기업 R&D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투자의 효과성 제고 •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 -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17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하여 고급일자리 창출 효과 -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성장 기반 확대 -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 조달 지원 체계 구축 -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유지 등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 우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 • IT/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2의 IT전성기 - IT/SW 인재 육성 강화와 IT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제도 개혁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 -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을 세운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추진 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 될 경우, 신용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을 추진한다.(신/기보법 등 개정사항) •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 - '재창업 지원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재창업/취업 가능하도록 지원 -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불량정보를 조기에 해제 - 대위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적극 매각토록 함 	

			<p>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 상용 SW 유지보수를 개선 - SW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p>• 소상공인/영세업자 자생력 제고 :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 추진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속 확충을 통한 쇼핑 환경 개선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및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연계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활성화 <p>•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p> <p>•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지원 확대</p>
<p>대기업</p>	<p>대기업 정책 방향</p>	<p>• 일감 몰아주기 근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부당내부거래의 실효적인 법 집행 강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개정) -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공시대상 확대, 계열사 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개정) <p>• 중소기업영역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공정거래법 제7조: 기업결합 제4항 제2호 개정) - 현행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진출을 보다 엄격하게 억제 <p>• 불공정거래관행 근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도급법 35조: 손해배상 책임) 개정 	<p>• 경제력 집중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총액제한제도 제도입 :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대하여 적용,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 3년의 유예기간 부여 - 순환출자 금지 -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 부채비율 200% → 100%,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 → 30%, 비상장기업의 경우 40% → 50%, 3년의 유예기간 부여 - 금산분리 강화 : 은행지부 취득 한도 축소, '계열사분리청구 제도'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p>• 불공정행위 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기업범죄의 유전 무죄 풍토 쇠퇴 <p>• 사회적 책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보완, 대기업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p>사업이양은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중소기업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 제한, 공공발주 사업에서의 소위 '통행세' 근절, 공공발주 사업의 하도급 참여 중소기업 보호 강화 -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조세감면 등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보호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추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규제 완화, 기업 공시의 확대 및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 추진
<p>여성 · 장 에 인</p>	<p>워킹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부담 • '13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비를 지원해 장애 최소화,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 아동, 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 맞춤형(나이에 맞는 세심한)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 보육시설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 	<p>여성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 '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 -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공기업 임원의 여성비중 확대 •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고용률 현재 53%에서 65%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제어 양질의 일자리 35만개 창출 - 연간 근로시간 2,193 →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여 일자리 창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개선 • 30여만 명의 가사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지급 - 파견 및 사내하청 여성근로자 정규직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도입 -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여성 비정규직 임금 인상 - 저임금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서 '가사사용인 제외'조항 삭제하고 'ILO 가사노동자보호 협약'을 비준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명시하여 성희롱 피해자 보호 대상 확대

			<p>-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예방조치의무 강화,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p> <p>• 무상보육 실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p> <p>-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전액 지원,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수당도 만 2세 이하, 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p> <p>- 국공립 보육시설 영/유아 인원대비 20% → 40%까지 확대</p> <p>• 영유아 등의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p> <p>- '방문돌봄 서비스'대상을 현행 0~5세 자녀가 있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 소득별로 돌보미 서비스 비용 차등 지원</p> <p>•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p> <p>- 산전후 휴가 기간 90일에서 14주로 확대, 산전후 휴가 급여지원금 상한액(현 월 135만 원) 인상</p> <p>- 육아휴직 급여 현행 40% → 50% 상향 상한액(현 월 100만 원)인상</p> <p>-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2개월), 해당기간에 통상임금의 50% 지급</p> <p>- 10세 미만 자녀 입원시 임시휴가 도입</p> <p>•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p> <p>- 국선변호사가 원스톱 서비스로 도움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p> <p>•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p> <p>- 폭력피해 지원기관간에 협력시스템 구축, 유기적 협조</p> <p>- 장애인, 아동 등 성폭력 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 지원시스템 체계화</p> <p>-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초기대응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p> <p>-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회복 프로그램 시행 및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p> <p>•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p> <p>- 미혼모 지원 확대: 보육, 아동학습, 생활가사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p>
--	--	--	---

여성
정책

			<p>지원하여 학습권 보장,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알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통합, 취업교육 및 훈련 지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 '이주여성 후견인제' 도입 - 일제강점기 피해여성 지원 강화: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근로정신대) 지원재단'의 조기 설립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일본 전범기업들간의 협상 지원
	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강화, 회의 개최요건 개선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현실화 (최고 15만 원 → 2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급여 금액을 2회에 걸쳐 총 5만 원 인상 • '발달장애인법' 제정 지원 •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 실시 • 장애인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부모의 (장애)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확대 및 여성 폭력 방지 네트워크 연계 • 교통수단 확충 •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상법 732조 삭제) 	장애인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연금의 현실화(현 월15만 4천 원 → '17년까지 39만 8천 원) • 장애인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진료장비를 확충하여 진료접근권을 강화, 건강검진을 제도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50%로 확대, 장애인 콜택시 100%로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 공급과 주거비 지원 •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옹호기구 설치 및 장/단기 종합지원체계 수립 •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과 장애제도에 따른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권리 강화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재정 · 복지	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조달의 원칙에 맞춰 5년간('13~'17년) 총 89.0조 원 (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할 계획임 1. 나라 빚을 내지 않음 2.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 3. 재원조달은 국제기구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 = 6:4'에 맞춰 마련 	세금 바로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공평성 제고 • 1% 부자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 재원확보 •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 -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비를 단계적으로 축소, '17년 12.5% 까지 축소 : 모든 비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 금 바 로 세 우 기	<p>최저한 세 적용 :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 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 확대 지원</p> <p>-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 1% 슈퍼부자증세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조정 → 1억 5천만 원 초과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배제</p> <p>-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초과시 25%의 세율 적용</p> <p>-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성</p> <p>-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 적용 → 증권거래세과세</p> <p>-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 현행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과세를 단일화하는 문제는 증권시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p> <p>-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 편의 증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월400)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 원(월 700)미만'으로 상향</p> <p>: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을 '마진과세(차액과세)'로 전환</p> <p>: '좋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확대</p> <p>: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상시화</p> <p>-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 배제 :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p>
--	--	--	--	--

			<p>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을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도 확보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조세정의의 실현 하고 복지재원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부담률 '17년까지 21.5% 이상 수준으로 정상화 :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입기반의 확충 그리고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
			<p>창조형 복지 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 등 '보편적 복지3+3'정책에 대해 지원 • 보편적복지 재원은 국제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장애인 생활 보장 강화, 어르신 지원확대 - 보편적 복지 3+3: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p>과학 기술</p>	<p>우리 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R&BD(기술사업화) 시스템 도입 - 국가 재난·재해 대비 방재기술 등 R&D예산 2배 확대 • 과학기술인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출신 공직진출 문호 확대 - 출연(연)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강화 • 소프트웨어 분야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공공부문 웹 기반시스템 재정비 및 모바일 웹 방식 어플리케이션 개발, 정부의 플랫폼사업자화 • 기후변화 대응 및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 원전 추가건설 중단, 설계수명 종료되어 안전성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 원전 안전규제 활동 강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육성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액 공제 확대 -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p>우리 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취수원 확보, 우수관거 개량 및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 기상이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 -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산, 강, 바다 등의 생태계 복원과 생태공원 조성으로 국민생활 개선 • 생활주변의 소음공해를 대폭 저감 •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 국내외 물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인력양성 기관 등을 연계하는 산업단체인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선진 막여과 기술을 적용하는 정수장을 확대하여 세계 물시장 주도 - 전지전자제품·자동차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사업 확대 - 중소환경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초기부터 해외수출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p>원천안 전과 성장 동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R&D 지원 확대 • 과학기술부 부활 -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량 강화 -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 보장 •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수행 - 국가 R&D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40%로 확대 • 지방 R&D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지방 R&D투자 비중을 2010년 29%에서 40% 목표로 확대 - 포괄 보조금제 도입 검토 - 지역혁신센터 설치, 기존의 연구기관과 연계 활동 강화 •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 의무 할당제' 실시 - 기술벤처 육성 인프라 고도화 -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공급 및 중소기업과 연계 활동 지원 역량 강화 • 이공계 우대 및 취업 지원 확대 - 장학금 지원 확대, 일자리 확충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 - 박사급 우수연구 인력 일자리 대폭 확충 - 공과대학 등과 연계한 융합프로그램 개설 등 자연계열 취업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및 학과 개편 지원
<p>교육</p>	<p>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 장애인 정규 교육 강화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교원 7,000명 증원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 고등교육시설 내 장애인 학습권 확대 및 보장 •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위한 	<p>사회 취약 계층 지원 및 공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아동 수당 지급: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 13세 미만 아동 필수 예방접종 무상 지원 • 방과 후·방학 중·토요일·공휴일 '나홀로 자녀'를 위한 완벽한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 • 청소년 일터 환경 개선과 유해 게임 등으로 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학교폭력 예방조치 강화 및 가해자 엄중처벌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p>교육</p>	<p>필요경비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프로그램(1인·1악기·1체육)으로 체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초·중·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한국형 '엘 시스템'(음악을 통해 아동 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한 학생오케스트라)를 모든 초·중 학교로 확대 - 학생주도의 동아리·봉사활동 활성화 및 적극 지원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일문화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등 8개 분야 문화예술강사 파견 운영 - 주 5일제 전면실시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하여, 토요일 창의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 5일 수업제 연계 폐교시설 활용,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확대 • 학교폭력 없애기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인력 대폭 확충으로 사전 문제 인지 및 대처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Wee 센터, Wee 스쿨, Wee 클래스 등 학교폭력 현장대처 기능 확대 강화 -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발생 원천 차단 • 산림교육을 통한 정서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각 단계별로 휴양, 보건, 교육 등 양질의 산림 서비스 제공 - 유아 및 청소년 대상의 산림 교육 인프라 구축 • 방과 후 학교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방과 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EBS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교육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수준별 학습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맞춤형 연계식 EBS프로그램 운영 •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3.9% → 2.9%) • 대학생 주거 걱정 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p>사회 취약 계층 지원 및 공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고교서열화 폐지 및 입시준비형 고교정상화 등 고등학교 체제 혁신 • '국·공립 대학 연합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 해소 • 국·공립대학 비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 입시준비형 자사고 등 MB식 고교서열화 폐지 및 정상화, 일반고교 상향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등 고등학교 체제 혁신 • 도·농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 교육복지 확대 •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를 통한 교육의 사회통합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 • 고령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생애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	---	-----------------------------	---